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野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與 “자본시장 활성화 반드시 필요
기업 의사결정 과정 공정해야”

野 “기업엔 쇠사슬, 노조엔 쇠파치”
구윤철 “우려 없도록 규정 마련 중”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



(왼쪽부터)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진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파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

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히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장,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회 밖 상반된 행보… 與는 민심 수렴, 野는 장외투쟁

與, 전국서 예산정책협의회
野, 약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서
오는 21일 대구서 당정 규탄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 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로비에서 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도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들어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

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외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환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국교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與, ‘법원장 남편·징역형’에 부적합 주장
연말까지 野 간사 공백 장기화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체적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재차 비판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